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2023 ~ 2027]

2023. 4.



해양수산부

순 서

I. 계획의 개요	1
II. 정책여건 분석 및 시사점	2
III.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전략	7
IV. 전략별 추진 과제	8
1. 수중레저 공간 확충	8
2. 수중레저 저변 확대	13
3. 수중레저 안전·문화 개선	16
4. 수중레저 산업지원 강화	19
V. 추진일정	22

I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수중레저활동은 수압·무호흡 등 제약을 극복하며 바다 속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도전적인 스포츠**로 견고한 매니아층 확보
 - 태평양·카리브해 등 해중경관이 수려한 해외 관광지와 미주·유럽에서는 보편적인 레저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증가 추세
 - * (연간 국내 활동자 추산) ('15년) 70만명 → ('19년) 79만명 → ('21년) 129만명
- 우리부는 해양레저 정책영역을 수중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정('16.5)
 - 수중레저활동 정의, 수중레저사업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안전관리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양레저관광 관심 증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중레저 선호 경향에 따라 **연관 사업체* 증가세 지속**
 - *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15년) 146개소 → ('19년) 612개소 → ('21년) 801개소
- 수중레저활동 관련 정책여건·성과를 분석하여 저변확대·활동자 안전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 마련 필요**

2 계획의 정의 및 범위

- (법적 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5년)
- (내용적 범위)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 교육·연구, 민·관 협업 및 산업육성 기반 마련 등

II 정책여건 분석 및 시사점

- ◆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동향 등 정책여건과 제1차('18~'22년) 기본계획 성과·한계 분석을 토대로 제2차('23~'27년) 기본계획 수립방향 정립

1 해외 수중레저 동향

□ 활동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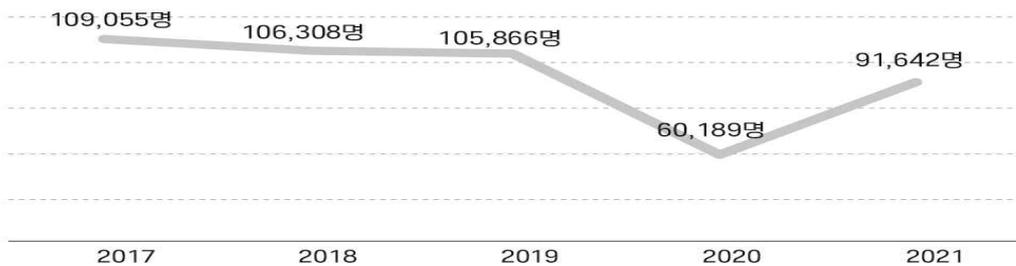
- (현황) 전세계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약 2,600만명, 그중 스쿠버다이빙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20년, Sports & Fitness Industry Association)

*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약 58% 수준) 등 해외 업·단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연 1회 이상 수중레저를 체험한 "활동인구(Active Participants)"를 추산

- 코로나19 기간 중 활동인구 증가세는 일시 감소하였으나, 국가 간 이동제약이 점차 해제되면서 회복 추세('21년, PADI*)

* 1966년 미국에서 설립, 186개국 6천여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 교육 단체

PADI 社 수중레저 자격증 신규발급자 추세



- (전망) 수중레저 입문자는 매년 10만명 이상 예상('21년 PADI)되나, 활동인구, 특히, 스쿠버다이빙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젊은 층의 다양한 체험활동 선호로 신규 진입자는 지속 증가, 주도국* 중심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화 등은 활동인구 감소 요인

* (미국) 연 2%대 활동인구 감소(연 8회 이상 활동자 6.5% ↓, 연 8회 미만 1.8% ↓)
(일본) 수중레저활동 자격(C-card) 신규 취득자 '16년 4.3만명 → '20년 2만명 감소

- 스쿠버장비(호흡기·부력조절기 등) 구매·대여없이 숨대롱·수경·오리발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으로 활동 가능한 스킨·프리다이빙 선호 경향

□ 시장 동향

○ (형태) 수중레저 교육·체험 사업, 장비·용품사업으로 구분

- ▲ (교육) PADI·SSI·NAUI 등 글로벌 교육 업·단체에서 주요 도시·관광지에 다이빙센터 (지사 또는 가맹점)를 두고 교육·자격발급 프로그램 진행
- ▲ (체험) 입문자는 다이빙센터에서 **자격교육과 연계**, 선호되는 형태는 요트를 이용한 **호핑투어**로 난이도에 따라, 산호초·동굴·난파선 등 **활동지 가이드**
- ▲ (장비) 호흡기·부력조절기 등 **스쿠버 장비**, 잠수복·오리발·수경·숨대롱 등 **상용품**, 다이빙컴퓨터 등 **전자제품** 분야 **판매·임대·수리**

○ (현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규모는 약 20% 이상 감소, 장비시장은 소폭 성장('22, Diving Equipment Global Market Report)

- 태평양 등 주요 관광국 방문객 급감으로 관광서비스는 감소하였으나, 국가 내 입문·활동자 교육·체험, 장비구매 등 반사 수요

○ (전망) 동남아·북미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 회복세, 장비산업은 개인장구·전자장비 중심으로 성장세 예상

- 젊은 세대의 간편한 레저활동 선호, 스마트화·개별화 취향을 고려한 D2C(Direct to Consumer) 시장* 확대, 착용장비** 제품 다양화

* (장비) 현장→온라인 구매, (교육) e-러닝 확대, (체험) 숙박연계 원스톱 예약 플랫폼

** 디자인·기능성 숨대롱·잠수복·오리발, 신체활동 모니터링·수중촬영용 전자제품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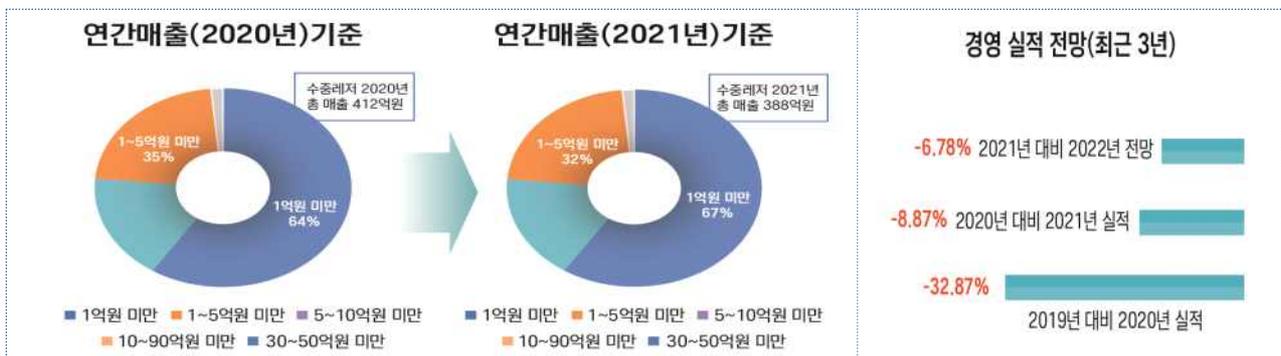
국내 수중레저 동향

□ 활동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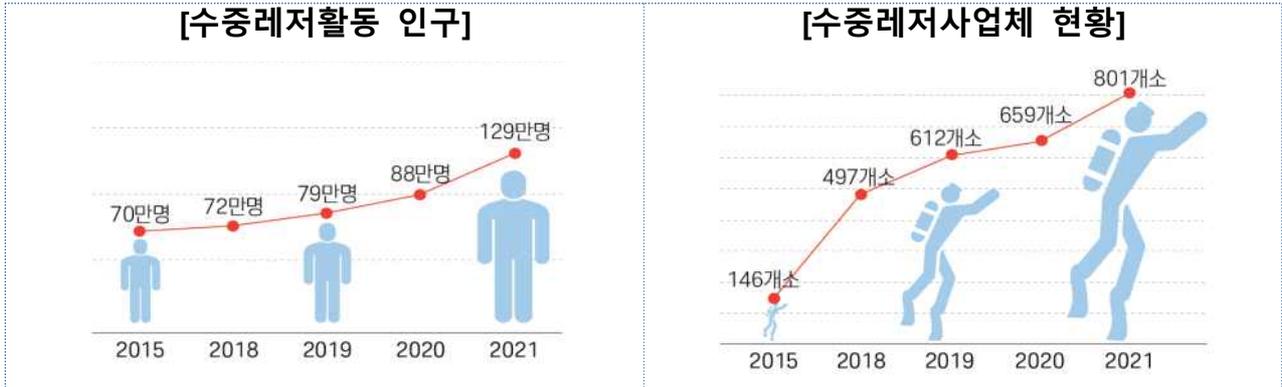
- (현황) 국내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하여 약 129만명 규모('21년)로 추정
 - 코로나19에도 매체·SNS 홍보, 해외여행 수요 흡수로 증가 추정
 - * 우리부 해양관광 이용객 조사 산출(3,847명 표본조사)
- (전망) 동남아 등 해외여행 재개, 입문자 자격취득·체험 등 실내·연안해역에서의 수요 감안 시 활동자는 지속증가 예상

□ 시장 동향

- (현황)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사업(운송·임대·교육업) 등록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 장비산업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
 - 수중레저사업체·종사자는 801개소 1,403명이며, 제주·동해 등 주요 활동구역*에 사업자가 집중되어 있고, 교육업 비중**이 높음
 - * 제주(24.2%), 인천(15.9%), 마산(12.7%), 동해(11.2%) 포항(10.7%) 등
 - ** 수중레저사업 비중(중복 등록) : 교육업(81.7%), 임대업(54.3%), 운송업(32.6%)
- 수중레저사업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412억원에서 '21년 388억원 규모로 일부(5.8%) 감소



- 장비산업은 호흡기·다이브컴퓨터 등 고가품은 수입에 의존, 잠수복·부력조절기 등 일부 국내 생산제품이 있으나 인지도는 낮은 편



- (전망) 수중레저 저변확대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은 점진적 증가, 장비분야는 국산화와 해외시장 공략 시 비약적인 성장 예상
- 수중레저사업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국내에 등록·운영 중이던 해외사업자의 복귀, 계류시설 포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 사고 동향

- 수중레저사고는 증가 추세(17년 대비 1.9배)이나, 짝 잠수 등 자발적 안전수칙 이행 등으로 활동자 증가(17년 대비 1.84배) 대비 평이한 수준
- 수중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수중레저법령과 자체 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자는 자격교육·취득 후 활동 경향
- 주요 사고유형은 의식불명·실종 등 활동 중 사고, 입·출수 시 선박과의 접촉사고로 구분되며, 대부분 인적과실에 기인 추정

* (사고·사망 통계) ('19)17건(8명) → ('20)25건(9명) → ('21)33건(17명) / 출처 : 해경청 협조



□ 주요 성과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율	추진결과('22년말 기준)
① 수중레저활동지원 인프라 확대(10개소 추가)	100%	10개소(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마리나항만 1개소, 어촌뉴딜300 9개소)
② 수중레저 일자리 창출(1,000개)	147%	1,403명(수중레저사업 종사자)

- (인프라) 해중경관지구(2개소) 지정('18년) 및 계류시설 확충(10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해중경관·개발여건 등 우수지역을 경관지구로 선정(제주 서귀포·강원 고성), 수중레저지구 계류장 신설·보강*
 - * 마리나항만 신설 1개소(경북 울진), 어촌뉴딜300 사업 중 레저선박 계류시설 보강 9개소(제주 3개소, 경남 2개소, 경북 1개소, 울산 1개소, 강원 1개소, 전남 1개소)
- (산업지원) 해양관광컨텐츠 개발지원 사업('20~'22년 총 3개소), 제주 해양레저박람회 신설('20년)을 통해 업계 홍보 및 체험지원 확대
- (안전관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20) 및 금지구역 지정('21, 1개소) 고시 제정, 사업장 안전점검·제도 등 사고예방 활동 추진

□ 한계 및 반성

- (활성화 사업) 청소년 체험지원, 광역 체험센터 조성 등 도전적으로 설정한 일부 추진과제의 경우, 법·예산 등 제약으로 이행 저조
 - ☞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방안을 고려한 과제설정과 이행관리 필요
- (안전·갈등관리) 수중레저 분야 저변확대 이면으로 안전사고 증가, 지역민과의 갈등 등 부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대응전략 미비
 - ☞ 활성화 과제와 더불어 이미지 개선, 안전강화 과제 설정 필요
- (협력·정보체계) 수중레저사업자 증가 등 산업규모 확대에도 동향 공유체계, 민·관 협업사례 미비 등 정책-현장 간 거리감 여전
 - ☞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동향관리 강화 필요

Ⅲ 제2차 기본계획 비전 · 목표 및 전략

비 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 함께 즐기는 수중레저

정 책 목 표

◆ 수중레저사업 일자리 2,000개 창출

(‘22) 1,591개 → (‘27) 2,000개(운송, 임대, 교육업)

◆ 권역 별 수중레저 거점 시설 조성

(‘22) 0개 → (‘27) 4개(동·서·남해 및 제주권역 체험시설)

전 략 과 제

추진 전략

1 레저 공간 확충

보다 편리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2 레저 저변 확대

보다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3 레저 안전·문화 개선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4 레저 산업지원 강화

기업 성장과 함께 도약하는 수중레저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활동 인프라 조성·관리

② 수중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① 수중레저활동 정보제공 확대

② 수중레저 체험기회 확대

① 안전규정 강화 및 이행력 제고

② 수중레저 이미지 건전성 확보

① 수중레저사업 역량강화 지원

② 수중레저 정책관리·협력 강화

IV 전략별 추진 과제

1 보다 편리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레저공간 확충)

- ◆ 권역별 수중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수중레저활동 연계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활동자 접근성·편의성을 개선

[1-1] 수중레저활동 인프라 조성·관리

□ 추진 배경

- 우리부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바다 속 경관이 우수한 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관리 중
 - * '18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개소(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지정
- 해중경관지구 지정 확대, 지역 거점 수중레저인프라 조성 및 실내 다이빙 시설* 관리·홍보 등을 통한 **레저활동자 접근성 제고 필요**
 - * 전국 약 50개소 실내 교육시설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체육시설법」상 수심 2.7m 이상인 체육시설은 수영장업 등록대상 제외

□ 추진 과제

① 해중경관지구 조성 및 확대

- 기 지정된 해중경관지구('18년, 2개소)에는 다이빙 전용구역, 장비임대, 휴게시설 등 수중레저 **종합단지 조성**(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 / ~'25년)
 - 초·중급 활동자 안전을 고려한 체험존 설정·관리, 사업자용 수중레저기구 계류시설 및 레저·관광객 체험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 해중경관지구(2개소) 현황 】



강원도 고성(죽도 일원)



제주 서귀포(문섬 일원)

- 해양레저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해중경관, 생태계 보전·관리가 우수한 해역에 대한 **해중경관지구 추가지정 추진**(~'27년)
 - 해중경관지구 취지를 살려 시설·인프라 개발 중심에서 환경보전·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 요소를 중점으로 선정기준 마련

② **실내 수중레저 체험시설 조성·관리**

-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버용 **실내 잠수시설(2개소) 건립**(전북 군산, 전남 보성 / ~'26)
 - 거점 단지의 해양레저센터 내 풀장을 구성하고, 인근 해수욕장·야영장 등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목적 관광 인프라 조성
- * (서해) '19~'24 / 387억원(국비 50%) / 전북 군산(무녀도) / 수심 25m급
 (남해) '20~'25 / 463억원(국비 50%) / 전남 보성(울포) / 수심 45m급

【 서·남해 권역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계획도 】



전북 군산



전남 보성

○ 지자체·민간에서 조성·운영 중인 실내 수중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통해 시설·안전 등 관리기준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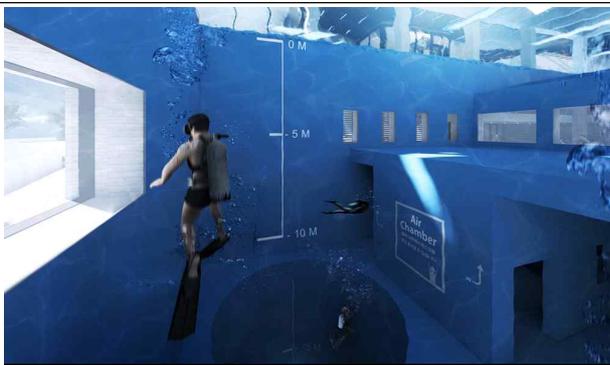
* 총 53개소 중 수도권(19개소), 경상권(16개소), 전라권(6개소), 충청권(5개소) 등 위치

- 전국 다이빙풀 운영실태 조사, 문체부 및 업·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실내 수중레저활동 시설 관련 법제화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 (시설) 수심 표시, 바닥 미끄럼 방지, 수질 관리 등,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밀집도 제한 등

- 사업장 인증·등급제 적용을 통해 우수시설 공표 등 홍보 병행

【 민간 수중레저 체험시설 예시 】



K-26(경기 가평, 수심 26m)



딤스테이션(경기 용인, 수심 36m)

③ 수중레저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 스킨스쿠버 등 레저·스포츠 체험과 더불어 쉼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인프라 조성 추진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

○ 해양레저, 생태, 치유 및 문화예술 등이 융복합된 해양레저관광 중심형 도시

【주요 해외사례】



【멕시코 칸쿤】

• 카리브해 최대 휴양·관광도시로 실내외 다이빙 시설, 야시장, 호텔·리조트, 골프 등 접근·연계성 우수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사업 시 **수중레저활동** 소요를 고려한 입지 공모 및 연관시설 건립 병행 검토
 - 입지 타당성, 잠재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어초 및 해조류 식재 및 수중레저 시설물(수중 우체통, 조각 박물관, 폐선 등) 배치를 통한 수중레저 명소 조성 추진

[1-2] 수중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 추진 배경

- 수중레저활동자를 활동 해역까지 운송하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기구*의 증가세 등을 고려한 **레저선박 수용능력 확대** 시급
 - * ('18년) 272척 → ('19년) 300척 → ('20년) 323척 → ('21년) 380척 → ('22년) 378척
- 연안에서 도보로 입수하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활동지역***의 진출입 계단·진입로 포장 등 **시설보강** 필요
 - * 해안가, 어항 물양장 또는 인근 방파제를 통해 입·출수 시 낙상 등 사고 위험

□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기구 계류시설 확충

- 수중레저사업자의 원활한 계류시설 확보와 요트, 보트를 활용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연안을 중심으로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대**
 - 수요*에 비해 부족한 **거점형 마리나**를 10개소로 **확충**하고, 배후시설을 조성하고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지원시설로 개발
 - * '21년말 기준 마리나시설의 요트·보트 수용능력은 10.1%, 향후 추가 개발이 없을 경우, '29년에는 5.0%까지 하락 전망
 - ** (기존) 울진, 창원, 여수, 안산, 부산 등 6개소 → (확충) 연안 광역지자체에 4개소 추가

- 주요 섬 관광자원의 접근성과 레저선박 계류시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소 개념의 바다역 구축 검토
- 바다역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마을 주도 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 지원



② 어촌어항 중심 기반시설 개선

- 어촌 신활력증진사업*('23~'27년)을 통한 노후 어촌·어항 개량·보수와 연계, 선박 계류장·진출입 계단 등 수중레저 안전·접근성 개선
 - 협소하고 노후된 물양장 확충, 안전취약 갯바위 내 안심길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지역민 생활과 더불어 레저인 편의·안전 도모
- * (사업유형 3-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23년 30개소 사업지 선정, '27년 까지 100개소 총 5천억원(개소 당 50억원) 지원 → 어항정주 및 어촌생활 안전시설 개선
- 어촌 유희공간 재생사업*, 귀어·귀촌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중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등 추진
 - 유희공간의 수중레저기구 대여, 수중레저활동자 샤워시설 리모델링 및 어촌계 운영 등 수익모델 창출 검토
- * (어촌 유희시설 개선사업-해드림 사업) 매년 3개소 선정, 총 15억원 지원(국비 50%)
 - 2년 이상 방치 미활용 건축물 등 유희시설 리모델링 계획수립 및 사업비 등



다이빙 선박 계류 공간



다이빙 장비 보관·정비공간

- ◆ 다양한 다이빙포인트를 발굴·홍보하고, 정보제공과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수중레저 저변을 확대

[2-1] 수중레저활동 정보제공 확대

□ 추진 배경

- 국내 다이빙포인트 정보는 활동자 동호인, 레저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유, 입문자 등 대중화를 위한 홍보·정보제공 부족
 - 수중레저는 이론·실내교육과 장비임대 등 소정의 비용·시간*을 수반하므로, 일반인의 진입, 활동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 이론 교육→실내(수영장) 교육→현장 교육 등에 3일 내외 소요
- 가상·증강현실 등 IT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중레저 간접체험을 우수 해중경관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가능

□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활동 포인트 발굴·홍보

- 수중경관이 수려한 다이빙 포인트를 조사하고, 공모전 등 활동자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 해중비경 20선(가칭)' 선정 등 홍보 추진
 - 해양레저박람회 등 수중사진 공모전, 해중경관지구 및 무인도서 자원 조사 등과 연계하여 주요 활동지 정보 취합
- 바다여행, 마리나정보시스템 등 우리부 해양레저관광 웹사이트,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통한 다이빙 명소, 체험정보 등재 추진
 - 지역 별 수중레저사업장, 지원시설 및 활동금지구역 등 정보 제공

② 수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간접체험 홍보

- 바닷속 체험을 느낄 수 있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시전·박물관 및 체험행사 체험프로그램 활용
 - 국립해양박물관·해양과학관에서 운영 중인 VR 콘텐츠 통한 상설 전시, 제주해양레저박람회 등 전시행사 관람객 방문체험 진행



VR 해중경관 체험(국립해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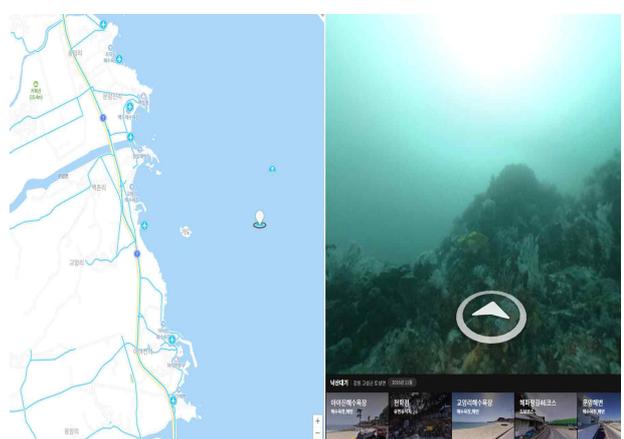


개방 海 VR 플랫폼(국립해양조사원)

-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수중 로드뷰' 활성화 추진
 - 우리부가 보유한 독도·이어도 및 해중경관지구 사진과 수중레저 활동자 체험 사진의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와 연계·홍보
- * (단계 별 추진 방안) ① 수중사진 → ② 다이빙포인트 별 관광정보 → ③ VR 영상



구글(Google) 스트리트뷰(필리핀 아포섬)



네이버 수중뷰(강원도 고성군 죽도 인근)

[2-2] 수중레저 체험기회 확대

□ 추진 배경

- 수중레저활동은 장비임대·교육 등이 수반되어 입문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일반인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필요
- 활동자 간 교류 확대,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 필요

□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 축제지원 확대

- 정부·지자체 개최 해양레저관광 분야 축제·행사 시 수중레저관광 콘텐츠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제주해양레저박람회·KIMA Week 기간 중 지역 수중레저업계 전시 부스 설치, 체험권(무료·할인) 배부 및 체험후기 등재

② 수중레저 대회 발굴·개최

- 스킨스쿠버 잠영, 짝 잠수 등 스킨스쿠버 분야 경쟁 콘텐츠 발굴, 대회 및 전국스포츠체전 시범도입 등 추진
 - 국내(생활체육대회), 해외사례 및 안전·운영규정 등을 토대로 일반 활동자와 전문가 경쟁형 대회 콘텐츠 발굴 및 체전 종목화



해양레저이벤트 개최(국제해양레저워크)

수중레저형 대회 예시(수중력비)

-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촘촘히 정비·관리하고, 수중환경보호 등과 연계한 건전한 활동이미지 확보 노력

[3-1] 안전규정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추진 배경

- 수중레저사고 유형은 주로 의식불명·실종, 선박·시설물과의 충돌 등으로 사고건수 증가 추세, 수중에서 사고는 인명피해 직결 우려
 - * 사고건수(사망자수) : ('19) 17건(8명) → ('20) 25건(9명) → ('21) 33건(17명)
- 레저활동 증가와 국민의 안전관심 증대에 따라, 안전한 수중레저를 위한 법제관리 강화, 사업자·활동자 안전의식 제고 필요

□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 안전규정 강화

- (사업자) 입·출수 등 안전확보 필요 시 관리자 배치, 종사자 정기(매 2년) 교육체계 관리, 수중레저시설물 안전기준 등 법제화 추진
 -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자 배치 및 수중레저기구 스크류망 기준 마련, 교육 인정단체* 지정·관리규정 제정 등
 - * (현행) 우리부 공고 → 등급 별 교육매뉴얼을 갖추어 신청 → 검토·지정(40개소 '22.12 기준)
- (활동자) 취수구(발전소) 등 지역 별 활동자 위해요소를 식별하여 필요 시 금지구역 지정, 야간 활동 시 준수 의무 강화 등 규정 개정
 - 금지구역 지정 요청 시 해경서·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 등 종합 검토, 야간 수중레저활동 구역·시간 등 신고제* 도입 검토
 - * 야간 활동시간·활동자·구역·목적 등을 기입하여 해양경찰관서(파출소) 신고

②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 (점검·감독) 수중레저사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운영실태 점검 내실화, 종사자 법정교육(매 2년) 및 자격관리 지도·감독 강화
 - 해경서·선박검사기관 등과 협력철 대비 합동 안전점검, 점검업무 담당자 대상 잠수장비·점검 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스킨스쿠버" 교육(연 2회) 先 배정, 민·관 전문가 점검지원 등
- (계도·홍보) 기상악화·표류물 발생 등 안전확보 필요 시 안전계도·시간제한 등 조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전개
 - 수중레저 활동제한 명령*, 지자체·해경서 등 유관기관 및 관내 수중레저 업·단체 간 유·무선 정보공유 체계 관리 추진
 - *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22조(영업의 제한) 등
 - 사업자 준수사항 및 자체점검표 등 온·오프라인* 제공, 해수욕장·항포구 홍보문구 게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캠페인 등 병행
 - * (오프라인)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배포, (온라인) 안전정보·자체점검표 모바일 송부

[3-2] 수중레저 이미지 건전성 확보

□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수중레저활동자의 과도한 수산자원 채취 등 어민과의 갈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수중레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 레저인은 낚시와 같이 관계법령 하에 이뤄지는 취미활동으로 보는 반면, 어업인은 마을어장 내 무단·과다채취로 어획량 감소 유발 입장
- 건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산물 불법·과다 포획 지양 등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호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 노력 필요

□ 추진 과제

① 수산자원 채취 규제·인식 제고

- 지역 수산업 보호와 일부 활동자의 불법 포획·채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법령 개선('22.4~)
 - 수산자원 포획·채취제한 기준* 확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지자체 별로 적용토록 위임조항 마련 등
 - * (현행)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금어기·금지체장 → (개정) 종류·마릿수·시기 등 추가
 - ** (현행) 채취도구·방법 규정(시행규칙) → (개정) 채취도구·방법·시간·구역 등(지자체 조례)
- 불법 수산물 채취·판매 우리부·해경·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건전한 수산자원 채취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추진

② 환경보호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수중레저활동자와 함께하는 프로빙 캠페인(가칭 : 바다를 ^{쓰레기를 담다}쓰담쓰담) 등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민·관 수중환경 정화활동 추진
 - 연안 환경정화, 바다식목일(5.10) 등 정기 정화활동 시 수중레저업·단체 참여 독려, 쓰레기 수거 용품(픽업백 등) 배포·홍보 등 지원
 - 수중쓰레기 수거 인증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및 적립 마일리지를 활용한 잠수장비 임대·체험할인 등 지원체계 검토
 - * (예시) 해양환경공단·수산자원공단 협의, '바다가꾸기' 홈페이지(www.caresea.or.kr) 등 기존 구축 정보시스템과 연계

<p>건전한 수산자원 채취 당부 홍보물('21.6)</p>	<p>수중환경보호 캠페인(해녀+레저동호인+해경서)</p>

- ◆ 수중레저사업체의 경영지원·컨텐츠 개발 및 기술연구 등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확립·개선을 위한 민·관 협업 강화

[4-1] 수중레저사업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배경

- 교육·체험 등 계절성 영업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은 컨텐츠·경영 지원,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장비산업은 기술개발 지원·홍보 필요

□ 추진 과제

① 수중레저사업체 경영 지원

- (투자지원) 수중레저 교육·체험 및 장비임대 사업자 대상 해양수산 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등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홍보
 - 우리부(KIMST)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진단 및 투자유치, 재무 분석, 자금조달 구조 설계투자사 매칭 등 지원
 - * 해양수산분야 연 20개社 기본 컨설팅 및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심화 컨설팅 실시
 - 귀어·귀촌 지원정책(우리부), 관광진흥개발기금(문체부) 등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창업·경영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컨텐츠지원) 해양레저관광상품 특화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 등 수중레저분야 관광상품 발굴·확산 지원 추진
 - 수중레저분야 우수한 상품을 공모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공모 및 창업 지원
 - * 해양레저관광분야 (예비)사업체 공모·지원(300백만)

② 수중레저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 (기초장비) 스킨스쿠버 연관 장비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초장비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
 - 공공→민간 수요확대 등 시장진입·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 국방부·해경청 등 다부처 기술개발 협업 및 기획연구 방안 지속 논의
 - (첨단장비) 차세대 친환경 레저선박 표준선형 개발, IoT·로봇 기술을 접목한 안전지원 수중드론 등 신기술 R&D 지원 강화
 - 전기모터·엔진 하이브리드 선박, 활동자 건강(산소포화도·동공움직임 등) 모니터링 장비 및 지원(Buddy) 수중로봇 연구개발·사업화 추진
- *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R&D) / 440억 / '22~'27년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p>[수중레저전용 레저선박 모식도]</p>	<p>[수중레저 원격 안전관리 체계]</p>

③ 수중레저장비 제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수중레저장비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장비 제조업체 판로확대 지원
 - 경기·부산국제보트쇼 등 국내 전시·홍보행사 시 장비산업계 참여를 독려하고 수중레저관 신설, 해외 바이어 면담 등 지원
 - 해외판로 창출·관리를 위해 미국·독일 등 우수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를 발굴하고, 장비운송·부스 및 참가비 지원사업 추진
- * (레저장비 산업지원 사업) 매년 10개소 내외 사업체 선정, 전시회 참가 지원('23년 2억)

[4-2] 수중레저 정책관리 · 협력 강화

□ 추진 배경

- 국내외 수중레저산업 동향·통계 관리체계 미비, 「수중레저법」 상 주요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민·관 정책협력 필요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산업계 지원을 위한 통계·법제 개선 등 관리 강화 추진

① 정책관리 강화

- (정책통계) 기존 해양레저관광 통계조사 범위에 장비산업·지역 별 활동자·만족도 등 조사분야 추가, 해경청과 사고통계 등 정보 공유
- (정책개선) 수중레저사업자 재난안전책임보험 도입, 야간 운송사업 기준 마련, 전문인력양성 등 안전·산업분야 법제보완·개선 추진
 - * 연구용역('23.3~12) →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24년~)

②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 (민-관) 수중레저 동향 공유, 관련 법·제도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업·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구성·운영('24~)
 - (사)한국수중레저협회* 등 유관단체 주관, 주요 전시행사 토론 세션과 연계하여 정책 발전방안 논의 및 안전 관리
 - * 「수중레저법」 제정('16년) 이후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설립(18년), 7개 지부 운영 중
- (정부-지자체) 우리부-지자체(광역·기초)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무 지방이양(시·군·구)*에 따른 정보시스템 정비, 업무인계·안정화** 추진
 - * 수중레저사업 등록·점검, 활동시간 제한 등('20.12 지방분권위 의결→'22.1 개정안 발의)
 - ** 수중레저사업 행정시스템 구축('22.12) → 지역 별 사무인력 수요 제출('23.1, 행안부)

V

추진체계

□ 추진 주체

구분	추진과제	담당
1. (공간 확충) 보다 편리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1-1. 수중레저활동 인프라 조성·관리	해중경관지구 조성 및 확대	해수부, 지자체
	실내 수중레저 체험시설 조성·관리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
	수중레저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해수부, 지자체 등
1-2. 수중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수중레저기구 계류시설 확충	해수부, 지자체
	어촌어항 중심 기반시설 개선	해수부, 지자체
2. (저변 확대) 보다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2-1. 수중레저활동 정보제공 확대	수중레저활동 포인트 발굴·홍보	해수부
	수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간접체험 홍보	해수부 (박물관·과학관)
2-2. 수중레저 체험기회 확대	수중레저 축제지원 확대	해수부, 지자체
	수중레저 대회 발굴·개최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
3. (안전·문화)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3-1. 안전규정 강화 및 이행력 제고	수중레저 안전규정 강화	해수부, 지자체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
3-2. 수중레저 이미지 건전성 확보	과도한 수산자원 채취 규제·계몽 강화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
	환경보호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
4. (산업지원) 기업 성장과 함께 도약하는 수중레저		
4-1. 수중레저사업 역량강화 지원	수중레저사업체 경영 지원	해수부, 문체부 등 (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수중레저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해수부
	수중레저장비 제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수부
4-2. 수중레저 정책 관리·협력 강화	정책관리 강화	해수부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 등

□ 세부 추진일정 (잠정)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23	'24	'25	'26	'27
1. (공간 확충) 보다 편리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1-1. 수중레저활동 인프라 조성·관리	해중경관지구 조성 및 확대					
	수중레저 종합단지 조성(2개소)					
	해중경관지구 추가지정					
	실내 수중레저 체험시설 조성·관리					
	지역 거점 수중레저시설 조성(2개소)					
	지자체·민간 수중레저시설 현황조사					
	실내 수중레저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수중레저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 로드맵 연구					
	권역별 공모·평가					
설계 및 공사						
1-2. 수중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수중레저지구 계류시설 확충					
	거점형 마리나 추가 조성					
	바다역 구축					
	어촌어항 중심 기반시설 개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유휴공간 재생 및 귀어·귀촌 지원사업						
2. (저변 확대) 보다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2-1. 수중레저활동 정보제공 확대	수중레저활동 포인트 발굴·홍보					
	다이빙포인트 및 활동지 조사·홍보					
	다이빙 명소 및 체험정보 등재					
	수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간접체험 홍보					
	박물관·전시관 VR·AR 콘텐츠 운영·확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중 로드뷰 활성화						
2-2. 수중레저 체험기회 확대	수중레저 축제지원 확대					
	해양레저행사 홍보·체험지원					
	지역 체험프로그램 정보제공 확대					
	수중레저 대회 발굴·홍보					
	수중레저 대회 발굴협의					
수중레저 분야 대회 개최·확대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23	'24	'25	'26	'27
3. (안전·문화)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수중레저						
3-1. 안전규정 강화 및 이행력 제고	수중레저 안전규정 강화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관련법규 개정·관리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수중레저사업자 안전점검·감독					
	정보공유, 안전계도 및 홍보					
3-2. 수중레저 이미지 건전성 확보	과도한 수산자원 채취 규제·계몽					
	수산자원 관리법령 개선					
	불법 수산물 채취·판매 점검 및 계도·홍보					
	환경보호 인센티브 체계 마련					
	수중레저활동자 프로빙 캠페인 정례화					
	수중레저쓰레기 인증·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4. (산업지원) 기업 성장과 함께 도약하는 수중레저						
4-1. 수중레저사업 역량강화 지원	수중레저사업체 경영 지원					
	해양수산 기업 투자유지 컨설팅 등					
	해양레저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지원					
	수중레저 산업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초장비 연구개발 추진(기획, 다부처 협의)					
	수중레저기구 등 신기술 연구개발					
수중레저장비 업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 수중레저 정책 관리·협력 강화	정책관리 강화					
	정책통계 조사·관리					
	정책 개선소요 발굴·이행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민·관 정책포럼 구성·운영					
	정부-지자체 지방이양 대비·대응					